

특집 : 정보격차해소 방안 사례

#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단계에 대응하는 정보격차해소 추진 방향



최 두 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장  
djchoi@kado.or.kr

## · 목 차 ·

1. 왜 지식정보격차해소가 중요한가?
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과 특성
3. 정보격차해소정책 추진 현황
4.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추진 방향과 도서관의 역할

## 1. 왜 지식정보격차해소가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국가사회 정보화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정보화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했다.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기존의 산업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정당의 정치활동이나 국민의 정치 참여에 인터넷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안방에서 수백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뱅킹, 온라인 주식거래가 보편화되었고 전자상거래 규모도 400조원에 달하는 등 IT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도 일상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e-러닝의 확대,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등 각종 여가, 문화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수준과 사회 전반에 걸친 IT 활용의 보편화로 우리나라는 ITU에서 발표한 디지털 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면에서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보격차 문제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크고 사회통합마저 저해할 위험이 있어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UN, OECD, ITU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중독 등 사이버범죄와 정보화 역기능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 각 부문간에 정보화 향유 기회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소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상이 새로운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 문제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크고 사회통합마저 저해할 위험이 있어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UN, OECD, ITU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용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주 사용되어 왔지만 정보격차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움직이는 과녁처럼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보격차는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및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사람 및 공동체간의 격차(gap)”를 의미한다. OECD에서는 정보격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 가정, 기업,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의 차이”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서는 정보격차를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초기 정보통신기기의 소유나 정보통신망 접근에 있어서의 차이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이용능력의 차이, 정보통신 이용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가 정보격차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보격차’라는 용어와 함께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또는 ‘정보 통합’(digital inclusion)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자원의 불평등 혹은 정보기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여타의 다른 사회적 격차보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지식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네트워크의 접속 여부는 단순한 소외의 차원을 넘어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배제(exclusion)를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네트워크가 발전될 수록 네트워크 접속 여부에 의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식정보사회는 정보경제사회이며

정보기술은 핵심적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경제구조가 정보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경제시스템 자체가 변화되고 고용구조나 노동방식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정보의 소유 및 정보능력 자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사회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정보이용능력이 부족할 경우 경제시스템에서의 배제가 불가피하다.

셋째,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문화적 단절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적 코드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세대간 문화적 간극이 크고 IT를 기반으로 한 신경제체제에서의 양극화 문제로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 기술 및 정보와 지식이 경제활동은 물론 우리 생활 영역에 보다 핵심적인 동인이 되기 때문에 지식정보격차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할 개연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방지할 경우 정보빈자는 정보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첨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접근권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 각 부문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과 특성

200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79.6%에 이르며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74.8%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소위 정보취약계층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컴퓨터 보급률 및 인터넷 이용률이 아직 많이 낮아 각 계층간에 정보격차가 상당히 존재한다. 즉 인터넷 이용률 면에서 앞서 언급한 4대 정보취약계층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35.1%로 전체 국민과 39.7%p의 격차가 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 수준이 낮다. 한편 컴퓨터 보급률 면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의 평균 컴퓨터 보급률은 60.1%로 전체 국민 가구 보급률과 19.5%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보격차 현상을 인터넷 이용률과 같은 단

〈표 1〉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지수 현황

연구팀	전체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50대 이상	취약계층 평균	격차지수
정보접근 지수	100	85.4	79.6	69.5	82.9	80.2	19.8
정보역량 지수	100	61.0	67.1	29.1	32.4	42.9	57.1
양적 정보활용 지수	100	67.8	69.3	38.1	41.7	50.3	49.7
질적 정보활용 지수	100	62.0	64.9	31.3	39.5	46.4	53.6

※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2006 정보격차 지수조사' 재구성

일 차원이 아닌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활용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정보격차지수(Digital Divide Index)를 통해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지수는 전체국민(100점)과 비교해 볼 때, 80.2 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정보역량 지수나 양적, 질적 정보활용 지수는 여전히 50점 미만으로 일반국민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 부문별 격차지수를 비교하면, 정보 접근(19.8점) 부문에 비해 역량(57.1점)·양적 활용(49.7점)·질적 활용(53.6점) 부문의 격차지수가 2.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컴퓨터·인터넷 접근 및 보유여부와 연관된 정보접근 격차 보다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 유형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와 비교를 위해 지니계수(Gini Ratio)를 원용해 산출한 정보불평등 계수(Digital Gini Ratio)를 보면 <표 2>와 같다.

정보불평등 계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0~1'의 사이 값을 가지며, 완전 평등 상태의 계수 값은 '0'이며, 완전 불평등 상태의 계수

값은 '1'로 나타난다. 2004년부터 3개년간의 정보불평등 계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 및 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불평등 계수(DGR)가 매년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불평등 계수의 특성을 보면, 접근 부문에 비해서 역량부문의 정보불평등 정도는 4.3배, 활용부문의 정보불평등 정도는 3.2배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보격차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보 접근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간에 정보격차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으나 정보이용능력이나 정보활용 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격차해소 정책도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강화 및 정보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정보격차해소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에서 정보격차해소 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본격 등장한 것은 1999년에 수립된

<표 2> 부문별 정보불평등 계수 - 일반국민 기준

구분	접근부문	역량부문	활용부문		종합부문
			양적 활용 부문	질적 활용 부문	
2004년	0.147	0.454	0.325	0.448	0.268
2005년	0.122	0.441	0.320	0.429	0.249
2006년	0.098	0.422	0.298	0.399	0.226
전년대비 감소폭	0.024 ↓	0.019 ↓	0.022 ↓	0.030 ↓	0.023 ↓

※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2006 정보격차 지수조사'

2001년 9월에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매년 범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이 마련 추진되어 왔으며, 2006년에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에 정보격차해소 부문이 포함되면서 부터이며 이후 2000년 4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식강국 건설 : 정보격차(digital divide) 없는 사회 구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시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어 2001년에 정보격차해소 추진의 법적 기반으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해 2001년 9월에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매년 범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이 마련 추진되어 왔으며, 2006년에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일반 국민의 80% 수준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보격차해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정보격차해소 정책 추진기간(2001-2005)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 접근환경 조성,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 개선 등 정보접근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농어촌지역에서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보접근센터도 1만개 가까이 되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1단계 정보격차해소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정보격차해소정책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 콘텐츠 측면에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활용 여건을 개선하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취약계층 500만 명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 활용능력을 증점 육성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IT기술 개발, 노인 친화적 IT 환경 조성, 미래형 농어촌 시범 구축, 유비쿼터스 기반의 저소득층 u-life 사업 추진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격차해소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후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 IT전문인력 초청 연수, 해외 IT봉사단 파견 등 국제 정보격차해소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4.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추진 방향과 도서관의 역할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간에 정보접근 격차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정보활용 격차는 상당히 크며, 특히 삶의 질 향상과 정보화가 연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인 측면의 정보활용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정보접근이나 이용능력 획득 중심에서 IT활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보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도 정보기술을 가진 자와 못가진자, 혹은 정보이용자와 비이용자라는 이분법적 개념에서 벗어나 정보이용자 내의 질적인 활용격차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격차해소의 정책목표와 중점 과제도 정보기술의 소유 혹은 정보이용능력의 불평등 해소에서 더 나아가 정보활용 격차를 해소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시대를 넘어 유비쿼터스 기술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u-IT)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격차의 문제가 IT기기의 소유나 단순 이용능력의 확보 차원보다는 얼마나

IT 기기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잘 활용하는가에 있다는 점에서 IT 인프라보다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와 지식’의 활용 능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즉 정보격차의 본질적 문제는 IT인프라의 소유 여부라기보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는 지식과 정보의 보유와 활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 산업화시대에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는 핵심 채널이었던 도서관의 역할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재정의 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이 단지 페이퍼 중심의 도서를 보관하고 유통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전자 정보 및 지식도 사회 전반에 유통시키는 핵심 채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도서관이 지역사회 of 누구나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했듯이, 지식정보사회에서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지식창고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참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 도서관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 보관, 유통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